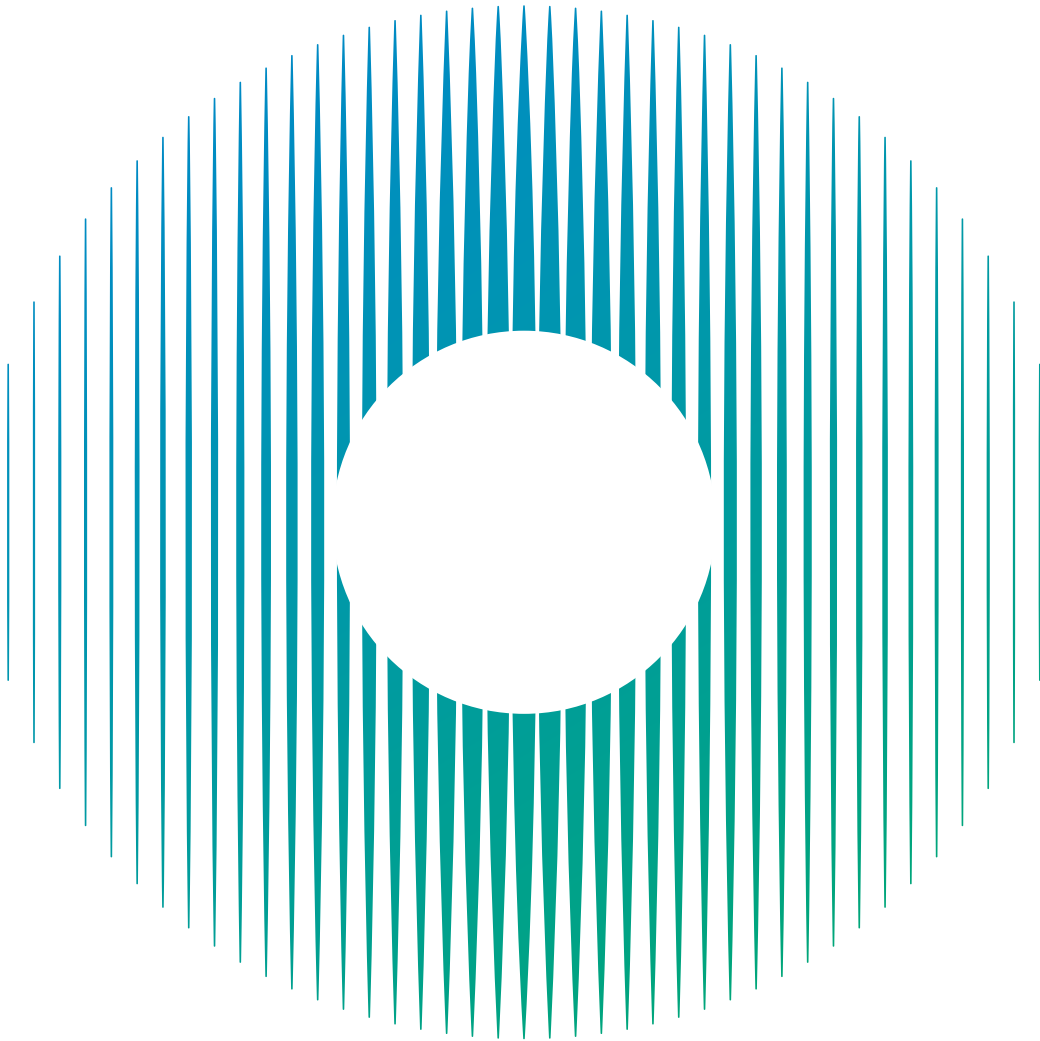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6년. 8월. vol. 10(격월간)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6년 8월 25일
제작 (주)현대아트컴

CONTENTS

이슈 노트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기대하며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업 소개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
수행기관: 밥일곰

테마 칼럼 1

함께 만드는 자립의 힘, 한부모가정의 더 나은 내일
이봉원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테마 칼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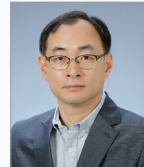
채무조정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안전망이다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

테마 칼럼 3

주린이의 금융시장 동참기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기대하며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금융복지(Financial Welfare)는 금융과 복지의 결합어이다. 금융과 복지의 조합이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및 서비스의 지급을 넘어서 개인 및 가족의 금융 진단을 통해 그들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며, 원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복지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전의 복지가 소득보조(현금지급) 중심이었다면 금융복지는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주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보조를 통한 전통적 복지의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백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보전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증가가 나타나기보다는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슈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복지는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여 경제적 위기에 내성을 갖는 자립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채무조정과 금융교육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금융복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 수 있다. 첫째, 부채해결 중심 접근이다. 소득 충격, 지출 경직성, 그리고 고금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가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제공하는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래 희망을 실현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일정 비율의 매칭금을 제공하여 초기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복지의 다양한 영역 중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2.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확산 과정

한국에서 시민들의 저축장려제도는 가계저축을 늘리고, 장기자금을 만들며, 특정 목적(주택, 근로자 자산형성 등)의 저축을 제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개발 시기(1970년대 및 1980년대)의 경우 높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 저축금리도 높은 상황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국민 저축동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2-1. 매칭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등장 및 확대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2007년 시설보호아동(이후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확대)을 대상으로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이 첫 출발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3만 원 월 저축액에 대해 3만 원(1:1 매칭)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시작된 후 제도 변경을 거쳐 월 5만 원 저축액에 월 10만 원(1:2 매칭)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9년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통장을,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한 꿈나래통장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이후 본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1(2010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대상 정책 발굴의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확산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2016년)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2018년),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2018년)과 청년저축계좌(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한 청년내일저축계좌(2022년)가 추진되었다. 또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희망적금(2022년), 청년도약계좌(2023년), 청년미래적금(2026년)은 각 정권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로 추진되었다.

지방정부에서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확대일로에 있다. 서울시가 2015년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실시하였고, 이후 경기도가 청년노동자통장(2016년)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대상 통장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국내 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시행기관	사업 구분
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특별시	· 희망두배청년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꿈나래통장
경기도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광주광역시	·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일+삶)통장,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
대구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대전광역시	· 청년희망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청년 미래적금
인천광역시	· 드림for청년통장, 행복씨앗통장(청년발달장애인)
경상북도	·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전라남도	·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충청남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반짝자립통장(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서울특별시 관악구	· 으뜸관악 청년통장
경기도 성남시	·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양평군	· 양평애헤청년통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년자산형성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영광군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 창원 청년 내일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청년종자통장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 출처: 2025년 자활사업안내 13-14.

2-2.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확산 이유

왜 이렇게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확산된 걸까?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도 확대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¹의 경우 탈수급율이 69%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정책 효과가 높아 기획예산처 또는 예산 당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관한 정책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자활사업의 탈수급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높은 탈수급율은 이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하였다. 자활 성공율이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제도에 관한 재정지원이 제도 확산의 결정적 이유일 수 있다.

둘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주요 특성인 선저축 후지원의 제도 운영의 특성도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급여와 서비스가 보장된다. 하지만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우 복지수급자가 먼저 통장에 저축해야만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복지수급자의 선행위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특성은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치적인 색채(보수 또는 진보)와 무관하게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실시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쉽게 실현될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을 설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저축액 및 매칭율의 설정, 그리고 금융교육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등 지자체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정치인들의 공약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소규모의 대상자 선정 후 실시되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 대상 정책 및 제도들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을 타깃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초기 자립자금에 부족한 상황, 정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현실, 소규모로도 실시할 수 있고 쉽게 실현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하게 도입·운영되고 있다.

3.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이론적 배경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은 상당히 놀랍다. 이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사업학과 Michael Sherraden 교수의 연구에 있다. Sherraden 교수는 1991년 발간한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라는 책에서 자산불평등과 자산효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혜택을 중상층 가구가 받게 되면서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높은 매칭율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자산형성의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herraden(1991) 교수의 이론은 제도적 저축이론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크게 매칭 저축 프로그램의 제도 설계와 관련 있는 저축요인이론과 왜 자산이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자산효과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제도적 저축이론의 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빈곤 완화와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 모델이다. 개인 또는 가구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실천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개인의 미래 설계 능력과 경제적 자율성 회복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Sherraden, 1991). 빈곤 정책에서 자산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전통적인 복지에서는 소득 부족 문제를 주로 생계 중심의 공공부조나 현금 급여를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보장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데 집중한 소극적 사회정책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실제로 기능하는 과정에서는 금전적 매칭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도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 심리적 거리감, 일상생활과의 정합성 등도 주요 작동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도 제도 설계 이상의 심리적·인지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소득 보장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기회 제공형 복지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의 미래 설계 역량과 자립 조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복지국가가 더 이상 시민을 단순히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개인이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능성 향상 국가(enabling state)' 개념과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특히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 방향을 구현한다. 즉,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산 축적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산은 개인이 장기적 계획과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고, 인적 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소득 보장제도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3-2. 저축요인이론

제도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존재를 넘어서, 제도 이용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적 저축이론에서 강조하는 '접근성(access), 기대(expectation), 정보(information), 동기부여(incentives), 촉진(facilitation), 그리고 제한(restriction)'과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개인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축 프로그램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접근성은 실제 저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된 요인이다. 이는 은행 및 ATM기 접근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 등의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은행들의 수가 적은 경우 큰 문제로 작용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은행 및 ATM기가 많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은행 결제가 흔한 상황이라 접근성은 아주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대는 저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저축 참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생각을 의미한다. 저축 프로그램 참여자가 일정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하면서 만기 시 그 저축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보는 저축 참여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 이후에도 저축 목적과 관련된 정보의 습득 그리고 제공되는 금융지식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보는 구체적으로는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동기부여의 경우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특히 매칭을 통해서 본인 저축액에 대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저축 프로그램의 관심 및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저축 프로그램의 원금에 대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촉진의 경우 저축 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저축 목적 달성을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이체가 촉진기제이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매월 저축액을 꾸준히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저축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 요인이 있다. 제한은 저축액을 꾸준히 입금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를 시키거나 저축 목적을 사회투자 관점에서 인정되는 영역(주택, 창업, 교육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만기 시 아무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축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출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제도적 저축이론



* 출처: Institutional saving theory(sherraden, 1991)

3-3. 자산효과이론

자산기반복지의 개념은 경제적 자원이 단순히 현재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한다(Sherraden, 1991). 여기서 '자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소유물'의 차원을 넘어선다. Sherraden은 이를 '자산효과(asset effects)'라 개념화하며, 자산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행동을 조절하며,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자산은 경제적 수단인 동시에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 초기의 자산 형성이 장기적인 삶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나 청년기와 같은 발달 시점에서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이어진다.

Sherraden(1991)은 자산이 갖는 복지효과를 아홉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만일 구성원이 실업 상태인 가구는 일차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이것을 소진하면 보험금, 차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고갈과 부채의 축적을 초래해 가구 안정성을 저해한다. 즉, 자산은 질병, 실업, 이혼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가구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자산은 미래 지향성을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식량, 주거, 의료 혜택 등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 현재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지 않는 반면, 중산층은 저소득층보다 더 강한 미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은 저축한 자산을 통해 미래 경제 상황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자산은 인적 자본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산 발달을 촉진한다. 즉, 자산에 관심을 두고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패 또는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성장하게 한다.

넷째, 자산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가구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 등에 집중하여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우 다양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다섯째, 자산은 위험을 감수할 기반과 행동을 제공한다. 자산이 많을수록 심리적·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감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자산은 우간다 고아 청소년이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소유를 통해 미래 대비 및 위험 행동을 자제한다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행동을 늘리고 해로운 행동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자산은 자기효능감 또는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Sherraden(1991)은 자산을 경제력과 연결 짓고 자산이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효능감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자산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저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축적한 자산은 아동의 자존감과 청년의 자기효능감 및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산은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즉, 자산은 경제적 차원에서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효과를 창출하며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어떠한 제약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낮춘다.

여덟째, 자산은 정치참여 등 시민참여를 장려한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동기가 있으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책 개발로 이어진다.

아홉째, 자산은 후세대 복지를 증진한다. 자산은 소득이 제공하지 못하는 세대 간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즉,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4. 나가며: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은 놀랍다. 하지만 어찌 보면 중앙부처별 그리고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예를 들어, 청년 대상 저축 프로그램인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의 실시 과정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정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포용적(inclusive)인 자산형성지원제도는 4가지 원칙들을 설정할 수 있다.

〈표 2〉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 방향: 이론적 틀

4가지 원칙	주요 특성
보편성(Universality)	· 모든 시민의 자산형성 기회 보장 · 금융인식, 이해, 태도 등에 관한 교육
누진성(Progressiveness)	·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동기부여 · 자산형성지원제도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금융복지 대상자로 인정
인생주기(Life-long process)	· 아동기부터 자산형성 기회 보장 · 인생주기를 고려한 제도 간 연계
적절성(Adequacy)	· 자산형성을 통한 미래 투자,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의 적절성 검토 ·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실행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진행

첫째, 보편성이다. 가장 이상적인 보편성 원칙의 적용은 1인 1계좌의 매칭형 저축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모든 국민이 매칭을 받을 수 있는 통장 1개를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싱가포르의 Child Development Accounts(아동발달계좌)의 경우가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통장사업을 실시한 사례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아동발달계좌와 Central Provident Fund(강제저축기금: 일종의 연금제도)를 연결하여 보편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누진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누진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확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즉,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매칭율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누진성 원칙의 적용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개념처럼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일생 주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발달계좌의 경우 출생 후부터 통장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디딤씨앗통장(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들이 대상)은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출생 후부터 자산형성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간 저축을 통해 청년기 기초자산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출생부터 아동기에 저축이 이루어진 이후, 성인기까지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를 연계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구축을 통해 일생 주기 차원의 자산형성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의 적절성의 논의가 필요하다. 적절성 이슈는 일차적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 과정을 통해서 저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주거 마련, 창업, 교육 등 사회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저축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러한 적절성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추가로 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While income feed people’s stomachs, assets change their heads(Sherraden, 1991: 6)”

위 표현은 Sherraden 교수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다. 소득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저축 및 자산형성 과정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적 저축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돕는 게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목표이다. 한국에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능한 희망과 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

수행기관

밥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열을 이어 꿈을 지원한다!

(사)밥·일·꿈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단법인 밥일꿈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은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과 금융교육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금융을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학, 진로, 실용경제 등 교과목에서 연금을 주제로 한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미래의 재무설계와 생애 자산관리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저하와 금융환경의 복잡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연금이라는 실용적인 주제를 교과 학습과 접목해 금융의 원리와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총 3억 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본 사업은 기존 경제수학·진로 과목 중심의 연금교육 수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올해는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진로에 따른 현실적인 금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산과 재무설계를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운영해 수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학교별 교육과정에 맞는 정규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교육 수업은 연금의 개념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연금 계산, 재무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직업과 예상 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직접 계산하며 노후 자산을 설계하고,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금융지식을 현실 문제와 연결해 생각하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전체 수업 종료 후에는 교사 연찬회를 통해 참여 교사 간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수업 경험과 후기, 개선사항을 나누며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우수사례와 수업 운영 경험을 담은 전자자료집(e-book)을 제작해 전국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학교 금융교육의 확산과 교육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금을 주제로 한 실습 중심의 교과 연계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설계 역량을 높이고, 표준 수업 모델을 전국 학교에 확산함으로써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자립의 힘, 한부모가정의 더 나은 내일

이봉원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누군가에게 자립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일이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자립은 생계와 양육,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많은 한부모들은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 취업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저축이나 미래 준비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생계지원만으로는 한부모가정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2022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형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20%를 응원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촉진지원’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상담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엄마는 히어로’ 앱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교육비 지원 ▲느린학습자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까지 추가되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실제 수치로도 평가·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산형성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으로 2022~2025년까지 진행된 사업을 통해 2,790명이 지원을 받았고, 17억 6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3년 자산형성 및 취업촉진지원은 목표였던 480명을 크게 넘어 828명이 실제 수혜를 받아 목표 대비 2배 가까운 분들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저축을 이어가고 취업교육을 이수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큰 성과와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자립지원입니다. 우울·불안·ADHD·가족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 결과 2023년 사업에서는 총 70명이 상담을 지원받았으며,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가족관계 78%, 사회적 지지체계 인식이 69%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024년부터 심리상담지원을 확대해

개인상담 48명, 가족·집단상담에 62가구가 참여하였고, 자녀교육비 지원사업까지 확대해 52명 아동에게 지원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지원 이전에 비해 77%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사업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추가해,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향후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큰 변화입니다. 2023년 구축한 ‘엄마는 히어로’ 앱은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육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23년 6,821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 9,571명, 2025년 12,800명으로 누적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앱에는 다양한 복지정보와 지원사업 신청 기능, 전문가 상담 등 220개 정도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목표로 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회복, 정보 접근성 개선,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한부모가정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든든한 정서적 지원과 함께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개선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다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립은 한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한 가정의 변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애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임직원과 대한사회복지회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아이 대학 진학에 쓰고 싶어서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통장에 입금합니다. 지금 비록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도 하고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저도 먼 훗날에는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자격증 취득과 면접비 지원 등 취업촉진 지원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후기 / 〈2025년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기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인용)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6.02.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채무조정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안전망이다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



우리는 빛진 사람을 볼 때 종종 너무 쉽게 판단한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썼을까”, “처음부터 계획성이 없었던 것 아닐까”, “빛은 당연히 갚아야지, 조정은 특혜 아닌가.” 그러나 막상 내 삶에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가족 돌봄, 고금리 부담이 닥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 연체에는 사정이 있고, 남의 연체에는 습관이 있다고 여긴다.

운전대 위에서 작동하던 해석의 이중 잣대가 금융의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내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타인의 어려움은 성실하지 못한 태도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채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빛은 한 사람의 소비 습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불안정,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부양,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사업 실패가 겹치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사람은 대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돌려막고, 미루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다가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는 빛을 가볍게 여기는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빛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조건을 다시 세우는 제도다. 갚을 의지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 조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주고, 다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핵심은 면책이 아니라 회복이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이행의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다.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안전망이 있다. 실직하면 고용보험이 있고, 병이 나면 건강보험이 있으며, 생계가 흔들리면 복지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금융의 영역에도 안전망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은 바로 그런 안전망이다. 사람이 빛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가족관계가 깨지고, 삶의 의지가 꺾이기 전에 다시 상황 가능한 질서 안으로 데려오는 제도다. 추락하는 사람을 끝까지 떨어뜨린 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손잡이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빚은 갚아야 한다. 이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갚아야 한다”라는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갚을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원래 조건만 반복해서 요구하면, 채무자는 더 깊은 연체와 추심의 악순환에 빠지고 채권자 역시 회수 가능성을 잃는다. 개인의 파산은 개인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이 흔들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노동 의욕이 꺾이며,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조정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와 사회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공적 조정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업에는 비교적 관대하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워크아웃, 회생이라는 말을 쓴다. 경영 환경이 나빠졌고, 시장 상황이 변했고, 자금 흐름이 막혔다고 설명한다. 어떻게든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채권단이 모여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시간을 주고, 회복 가능성을 따진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왜 그토록 쉽게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붙이는가. 한 사람의 삶도 하나의 작은 경제다.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도 있다. 기업에 회생 절차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도 재기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채무조정만으로 재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빚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출발점일 뿐이다. 이후에는 일할 기회를 얻어 소득을 회복해야 하고, 무너진 신용을 조금씩 올려나가야 한다. 다시 통장을 관리하고, 다시 면접장에 가고, 다시 매달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기는 제도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버텨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기관은 채무조정 중인 미취업청년들이 신용과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직업 역량을 키우며,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채무를 조정해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갚을 수 있는 힘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기의 조건을 세 방향에서 보완한다. 먼저 신용컨설팅과 신용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점수의 회복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내가 다시 나아지고 있다”라는 확인이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증거다. 다음으로 취업·자영업 컨설팅, 직업훈련·자격증 취득·면접활동 지원 등을 통해 소득 회복의 길을 연다. 상환능력은 의지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일할 기회와 배울 기회가 함께 주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지원은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한다. 빚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다시 쌓아보는 경험이다.

특히 청년 채무 문제는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청년기의 연체와 신용 하락은 현재의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취업, 주거, 창업, 결혼, 자립의 기회를 늦추고 삶의 출발선을 뒤로 밀어낸다. 사회가 너무 이른 시기에 실패를 낙인으로 고정해버리면, 한 사람의 가능성은 회복되기도 전에 위축된다. 반대로 적절한 상담과 일자리 지원,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지원사업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왜 빚을 졌느냐”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용을 회복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함께 물어야 한다. 단죄의 질문에서 회복의 질문으로 이동할 때, 채무조정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누군가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판사의 망치를 먼저 들기 쉽다. “저 사람은 돈 관리를 못 했어.” 그러나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다. 실직이 있었을까. 병원비가 있었을까. 폐업의 충격이 있었을까. 가족을 지키려다 혼자 감당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일까, 아니면 다시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손잡이일까.

채무조정은 빚을 가볍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빚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나누는 제도다. 신용상승과 취업,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원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만드는 동행이다. 실패한 사람을 골라내는 사회는 차갑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도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사회는 강하다. 채무조정은 그 믿음을 제도로 보여주는 일이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7.01.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주린이의 금융시장 동참기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현대자본주의에서 소득의 원천은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다. 노동시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직업시장이고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이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상품 유통,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자금 유통과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금시장이다. 그런데 기업에서 제조하는 수천 가지의 상품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반면, 금융시장에서 만드는 상품들은 그 본질을 잘 모른다. 은행이나 증권 회사, 투자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의 소득 원천은 무엇인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시장과 직업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미치고 심지어는 공황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러하다. 두 건의 금융위기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무고한 직장인들을 기습했다. 1998년에는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일터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는 3만 달러를 향하던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1만 5천 달러대로 떨어뜨릴 만큼 위력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에서 비롯되었다. 저당권을 소유한 모기지 대출기관은 대출채권을 발행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산유통회사들은 주택저당증권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았는데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증권사, 보험사, 투자자가 서로 얹힌 채 애초의 저당권 가치가 4배가량 증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때 집값이 느닷없이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일시에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산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월스트리트를 거쳐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이다.

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한 것은 2008년 10월 24일이었다. 한국 증시에서 50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각종 펀드와 투자 기금이 반토막 났으며 환율이 1,500원 선으로 급등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덮치자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었으며,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은 달러에 기갈이 든 것처럼 보였다. 이른바 '악마의 맷돌'(Satanic Mill)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필자는 이렇게 썼다.

“악마의 뱀들을 달래려 미국이 1조 달러의 공물을 바치고, EU가 수조 유로의 구제금융을 모으고, 아시아가 8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용서를 빌어도 거식증에 걸린 금융시장은 대륙을 가로질러 질주한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앉을 태세다. 허기진 시장은 돈의 주인을, 주인의 인품과 형편을 따지지 않는다. 기업자금, 세금, 보유 외환을 포식하고도 모자라 결혼자금, 학자금, 증권, 주식, 투자금, 대출금에 서린 서민의 애환과 소망을 먹어 치웠다. 마치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떼와 같고, 히치콕 영화의 새 떼와도 같다.”

그해 금융위기는 기업과 서민 생계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진정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렇게 근사하게(?) 씌움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금융시장 경험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택대출금에 이자 납부, 적금 정도라고 할까? 교수 월급으로는 장기 예금조차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실물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을 단단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요체이므로 주식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진즉에 있기는 했으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터였다. 마침 한국의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다.

기어이 예금을 헐었다. 전 국민 주식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금 떼고 2% 남짓한 이자에 목을 맨 평생의 인내심을 포기한 후였다. 앱을 깔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증권사 직원의 희망찬 목소리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아니야, 이걸 국가 산업에 투자하는 거야, 십시일반 돈을 보태 기업을 살리는 애국의 길이지.” 생애 최초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서 식민시대 그 비장했던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렸다.

주가는 상승세였다. 은행 1년 이자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 삼일 후에는 5년치 선을 치고 올라갔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넣을 걸, 후회가 밀려왔다. 주식 매수 방법을 들었건만 앱에 익숙지 않은 손가락이 떨렸다. 수익 20% 선에 도달했을 때에는 술 한 잔 마시며 혼자 하죽거렸다. 다른 적금을 깨야 하나. 머릿속에 화톳불이 계속 켜졌다. 유튜브가 권하는 손절이니 익절이니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다만 수익선을 상향 조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쉬운 걸 왜 평생 외면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올상일까 하는 즐거운 조바심이 내면에서 들끓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터졌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 달 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상승분이 몇 시간 만에 날아갔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주가 하락을 대비하라는 주식전문가들의 경고를 흘려들은 건 아니었다. 대비할 방법을 몰랐다. 국가경쟁력 증진에 동참한 길에 그 정도야 견딘다는 소명의 방벽을 둘러친 터였다. 그런데 주가는 정체를 몰라 수십 개의 납추를 달고 사뿐히 낙하했다. 마치 한 걸음씩 힘겹게 도착한 5부 능선에서 등을 떼밀려 낭떠러지에 추락한 느낌이었다. 결국 탈출했다.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안도의 한숨은 주가가 보름 뒤 원상 복귀했을 때 탄식으로 변했다. 참을 걸. 견뎌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걸. 그러나 무경험 초보자에게 뱀집이 있을 리 없었다. 시장은 도대체 급락의 원인이 뭔지를 따질 겨를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앱에 매달렸다. 하루에도 앱을 켜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 나이에 무슨 짓? 아니야,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지. 길가 휴게소 청년들, 버스 승객들도 주식 앱에 열중이었다. 짧은 탄식과 환호가 겹쳤다. 결국 다시 진입했다. 이번에는 작은 적금을 털어 투자액을 늘렸다. 25% 수익을 자체 결정하고 내심 승전의 미소를 지었다. 주식은 안정을 되찾아 작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세였다. 고지가 보였다.

목표에 거의 도달한 6월 초순 시장이 다시 계곡 깊숙이 낙하했다. 하락의 원인을 정확히 짚는 사람은 없었다. 주가 급상승에 따른 '일시 조정'이란 말은 개념 규정이지 요인 분석은 아니었다. 총만함을 선사하던 수익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원금 터치다운 일보 직전이었다. 원금을 뚫고 활강하는 주가의 공포는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번에는 맷집이 생겼는지 충격이 조금 약했다. 그때 알았다. 빗투에 나선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하루 종일 앱에 망명해도 훼손된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찢찢맬 수밖에 없음을. 주식시장은 격려금은커녕 이자도 주지 않는 흑한의 극(極) 지대다.

두 번의 참패 끝에 필자는 흑한 지대를 빠져 나왔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현장 학습이었다.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투기다. 유망한 기업에 장기간 자금을 대고 적정 보상을 받는 주식시장의 대의(大義)를 잇는다면 이른바 단타는 도박이고, 앱은 중독이다. 그런데 급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불장에서 대의보다 대박을 외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걸 어쩌랴.

주가는 필자의 예상과 항상 거꾸로 움직였다. 오를 거라면 내렸고, 내릴 거라면 횡보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자본시장 큰 손들의 수시 결단, 빅테크들의 우위권 경쟁과 경영전략, 유가와 반도체 가격 등 외부 요인들에 의해 휘청거렸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 강국이라면 이토록 흔들리지 않을 텐데. 금융 약소국의 투자자는 정체를 모르는 외부 요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나 할까. 그러니 아무리 투자 고수라 해도 투자 대상, 정확한 가격과 시점을 판별하기가 어려운 안개 시장이다. 이런 불장에서 대의와 소명익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저 생존하기 바쁘다. 고비마다 항상 돌발변수가 어디선가 튀어나왔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탓할 수도 없다. 그저 운(運)과 경험이 수익 실현의 가장 든직한 무기일 뿐이다. 마침내 필자에게 깨우침이 왔다. 주식 세계란 풍량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엽편주를 띄우고 24시간 흔들리는 것

달고 쓰린 이런 국민적 경험은 한국 금융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데에 필수적 코스라는 생각은 든다. 악몽과 길몽이 층층이 겹쳐 금융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과거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와 금융은 자본주의의 두 개 축이다. 독일은 제조업을 붙들고 있는 반면 영국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을 키웠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금융으로 비중을 옮겨 월가의 큰손을 양성했고 금융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한국이 제조 강국의 정상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금융산업이 뒷받침돼야 함은 20세기 역사가 증명한다. 주식 열풍에 뛰어든 우리는 금융 강국으로 가는 노잣돈을 지불하는 중인가.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7.20.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